

수신	전북지역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성명 하단 참고)
담당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010-8639-0214, onespark98@gmail.com)
제목	<성명> 전북대 병원 이송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발송일	2017년 11월 23일

<성명> 전북대학교 병원의 이송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1. 지난 주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지난 해 9월에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이 다시 한 번 알려졌다. 우리는 전북대학교 병원이 이송환자 사망사건과 관련되어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지난해 9월 30일, 2살 김모군과 70대 노인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전북대 병원은 다른 응급환자가 있으며, 수술실과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김군에 대한 전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약 7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 소재의 아주대병원으로의 이송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군은 이송과정에서 결국 사망했으며 70대 환자 역시 이송 후 5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3.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17개의 수술실 중 15개의 수술실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직 의사는 현장에 부재중이었다. 또한 당시 정형외과 의료진 역시 학회 등의 공식 일정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부재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재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병원은 사망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나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전북대 병원은 여전히 사건의 진상을 감추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4. 우리는 안타까운 죽음이 비단 두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현실

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전북대 병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응급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도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을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

5. 한편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최근 폭로되었던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환자 이송 당시에 의료진이 부재하고 7시간이나 환자를 방치한 것은 현장에 있던 의료인 개인의 실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시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응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폭력적인 권위와 복종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병원문화가 부조리한 구조에 대한 내부적 자정과 개선을 어렵게 했을 것이다. 병원이 책임을 당시 전공의에게만 돌린다면 이는 책임전가일 뿐이며, 여전히 사태파악과 대처에 미진한 것이다. 부조리한 체계를 개선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인권적인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역시 전북대 병원이 마땅히 해야 할 과제이자 의무다.

6. 전북대 병원은 이송환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엄중한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5월에 조건부 재지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병원은 말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개선과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 체계의 해결에 앞서 이 사건의 환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북대 병원은 공공의료 기관다운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7. 11. 23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이상 7개 단위)**